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6월 ~7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사드, 비관세장벽, 중국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사드, 비관세장벽, 중국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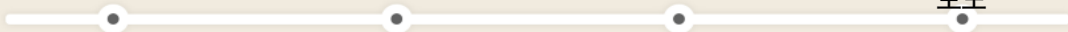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6. 7. 13.
사드 성주 배치
서명

2016. 7. 23.
유일호 경제부총리
비관세장벽 우려

2016. 7. 24.
왕이 외교부 장관
사드 비판

2016. 8. 9.
중국 환구시보
사드 제재 이미 시작
보도



핵심이슈
도출

“한국 사드 배치로 중국 비관세장벽 강화 가능성 높아”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한국 사드 배치로 중국 비관세장벽 강화 가능성 높아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비관세장벽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배제 못한다." 중국 청두를 방문한 유일호 경제 부총리는 7월 23 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하면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중국 내 비관세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기존에도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으로 대응해온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7월 12일 발표한 '중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2015년 가공식품 통관거부 사례는 전체의 57%인 1,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은 매 품목마다 중국 식약청 (C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자의 한국 세균 수 기준은 1그램 당 7,000 마리 이하로 규정하는데 반해, 중국의 기준은 1그램 당 750마리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김치, 젓갈 등 비조리, 발효 식품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일반세균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각 성별로 서류, 통관 절차 등 기준이 다른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는 점도 문제다. 중국 산둥 웨이하이항 세관은 다른 지역 세관과 달리 원산지 증명서에 광역 단체장 관인이 있어야만 통관수속을 할 수 있다. 중국 광둥성 심천항은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사드 배치 논란으로 가뜰이나 까다롭던 수입식품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거나 비관세장벽이 더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농식품 기업들을 애태우고 있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최근 사드 배치 등으로 중국 내 비관세장벽 조치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통상 마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써 첫째, 중국 수입 기준에 맞는 품질 경쟁력을 갖출 것, 두 번째,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여 양국 정부 및 실무자간 협의 채널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고려할 것, 세 번째, 수출 기업 자체적으로 중국의 무역 정책 및 법 제도에 대한 사전 검토, 현지 기업 네트워크,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 등을 꼽았다.